

“노동자 빠진 조선업 상생협약 인정할 수 없다”

노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협약 비판 ... “범죄자 업체 사업주들부터 처벌하라”

금속노조와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2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 열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에 대해 당사자인 하청노동자가 빠진 정부와 자본 간의 밀실 잔치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등 조선하청세 지회는 3월 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원하청 사용자만의 상생협약 체결식 비판 조선하청 3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와 조선하청지회는 2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등이 참석한 협약 체결식에서 발표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내용은 말장난이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곡기를 끊었던 하청노동자가 말한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문제는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였다”라며 “이 참혹한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한 주체는 노동부 등 정부였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헌법 권리인 노동 3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노조와 지회는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경찰과 어용 폭력배를 동

원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들이야말로 파업을 조장하는 ‘파업 만능주의자’ 들이다” 라면서 “불법 다단계 하청 운영, 4대 보험 횡령, 임금·퇴직금 체불, 위장폐업 범법자 사업주들을 엄중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범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노조, 조선하청 세 지회는 “정부와 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원하청 사업주 부당노동행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4대 보험 횡령·4대 보험 미가입·불법 다단계 하청 사용·임금체불 등 즉각 처벌,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470억 원 손배 모자라 간첩 혐의까지 씌우나”

금속노조·416개 단체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 규탄 한 목소리 ... “공안탄압이 선 넘었다”

금속노조와 416개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 투쟁에 공안탄압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8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금속노조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통해 “노동운동, 민중운동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 선을 넘었다” 라면서 국정원이 노조 경남지부를 침탈,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압수수색한 사건을 언급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생존권을 위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국가보안법 간첩으로 몰면서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금속노동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 라며 “정권의 행태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닮았다” 라고 꼬집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이 노조법 개정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 등 온 힘을 다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와 권영국 변호사,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자와 연대해 노조법 개정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안탄압 피해 당사자인 강인석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470억 원 손해배상만으로 자본과 정권의 분이 풀리지 않나 보다” 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내게 지령을 내린 사람은 2,1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다” 라며 “이 노동자들이 온갖 차별과 불법을 막아달라고, 삶을 개선해달라고 제게 지령을 내렸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시민 70% 이상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동의했다” 라며 “어떻게 이 투쟁이 북한

의 지령으로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강 부지회장은 “파업부터 노조법 개정, 국가보안법 조사까지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며 “앞으로도 함께 해달라” 라고 연대를 호소했다.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경남 창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안석태 노조 경남지부장과 강인석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수색영장을 집행한다고 했다. 노조와 경남지부는 즉각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2월 24일 경남 창원에서 노조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된 비상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투쟁방침을 논의하고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총파업 투쟁에 곧장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라며 “윤석열 정권의 전면전 선언에 금속노조는 당당히 저항의 선봉에 설 것이다” 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2월 27일 5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싸우고, 압수수색 시도 시 물리력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